

장막에 가려진 경찰 인사시스템...청탁 비리 키웠다

'사건 브로커' 수사로 본 인사시스템

경찰의 '사건 브로커' 수사에서 경찰의 인사비위가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갑이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에서 싹튼 비리를 겨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정오까지 전남경찰청 인사계·안보대와 해남·진도경찰서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사건브로커 A(62)씨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최근 숨진 전 전남경찰청장 B차안감과 구속된 전남경찰청 소속 전 C경감 등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정과 경감 등 인사 대상자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 2000~3000만원 정도의 금품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C경감이 A씨에게 청탁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건네고 이 금품이 경찰 고위직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전남경찰청 인사계에서 B차안감 제임 시기에 2021년 경위부터 경감까지의 승진인사 자료를 모두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당시 승진을

심사·특별승진 근평 비공개로 지휘관 주관적 평가에 승진 좌우 광주지검, 전남경찰청 등 7곳 압수수색...인사 비위 집중 타격

한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미 퇴직한 경찰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A씨와 같은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승진에 '묵숨 거는' 상황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승진에 묵을 댈 수밖에 없는 경위와 경감은 이미 포화상태로 간부급 경정과 총경의 경우 자리가 너무 적다. 힘들게 경정으로 승진해도 14년 뒤에 총경을 맡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빠를 경우 40대 후반에도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승진 경쟁을 벌이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경찰조직은 전형적인 '항아리' 구조라는 점도 인사 난맥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 총 3842명 가운데 총경은 22명, 경정은 134명, 경감은 856명, 경위는 1366명, 경사는 605명, 경장은 412명, 순경은 278명이다. 전남경찰청 전체 인원 6028명

중 총경은 42명, 경정은 139명, 경감은 1268명, 경위는 2241명이다.

경찰 승진 인사는 내부승진을 위주로 하는 폐쇄형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 인사청탁과 비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감까지는 근속하면 승진할 수 있지만 경정부터는 시험과 심사만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항상 뒷받침이 나온다.

심사승진은 경무관 이하의 계급승진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경정 이하 승진의 경우에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각각 50%의 비율로 행해지고 있다.

심사승진의 절차는 먼저 승진대상자가 선정된다. 승진소요 최저 근무년수에 달한 자를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가점평정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작성해 심사승진 임용예정자의 5배수 이내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문제는 여기에 지휘관의 평가 점수가 포함된다라는 것이다. 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의 경우 대상자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국 지휘관의 점수가 결국 승진대상자를 가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정도 비공개여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승진에 대해 불



무안군 삼함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23일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공조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경찰들은 지휘관과 연고가 없다면 브로커를 통한 청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고

과는 지휘관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돼 공정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발탁이나 재량에 의한 비공개 승진 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판결문으로 드러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보니

추진위원장 "돈을 만들 곳은 광주 밖에 없다" 사적 계좌로 돈 받고 이중분양...81억 가로채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며 125명에게 81억원을 받아 쟁전 일당의 범행은 초창기부터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대행사 회장인 A(72)씨는 지산동 일대에 신축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50)씨, 아들 C(50)씨와 함께 2016년 6월 홍보관을 세워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고 한 달 뒤 자신들의 대행사와 업무대행영역을 체결했다.

판택, 군산 등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자금 부족 등으로 채무가 늘자 "돈을 만들 곳은 광주밖에 없다"면서 "분양가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신축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라"는 취지로 B씨와 C씨에 말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동 호수 중 일부를 무작위로 지정해 '지주세대 지위승계·부적격 세대나 임의세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며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 본부장을 속여 신축회사가 아닌 추진위나 개인계좌로 분양금을 받았다. 이 금액은 부족한 홍보관비용과 토

지 용역비 등에도 사용됐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이 계약한 동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고 속여 조합원 모집업무대행업체 본부장과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이중계약을 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에게는 프리미엄(기존 계약자에게 주는 돈)을 쥐여 한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또 주택조합과 대행사 명의로 자금집행요청서를 신축회사에 제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자금을 집행해 주는 것을 악용해 조합비를 가로챘다.

이같은 혐의로 검찰은 A·B·C씨와 조합모집대행업체 계약을 맺은 업체 관계자 5명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6월~1년 6월을 선고했고, 조합원 업무대행업체 팀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 이번엔 대입 미술 실기 출제 오류... 재시험 치르기로

치전원 합격자 번복 이어 또 파문 입시 행정 공정·투명성 의심

전남대학교 입시 행정의 공정·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최근 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번복에 이어 대입 미술실기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드러나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23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수험생 대상 한국화전공 실기시험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정물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모집 요강에서 '수묵담채 실기시험 정물 21개'를 지정했으나 이날 시험에는 일부 다른 정물이 출제됐다.

전남대는 수험생들이 '모집 요강과 출제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하자 확인을 거쳐 정물 3개가 수시모집 요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인물수채와 수묵담채 2개 분야 실기 과목 점수를 무효처리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수험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은 최근 2024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하룻만에 '불합격'으로 번복하기도 했다.

대학측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자 4명의 이들의 학사과정 성적이 백분율이 아닌 평균평점으로 입력된 것이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애초 합격에서 불합격 처리됐고 나머지 3명은 합격, 불합격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는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공무직 취업 청탁 알선 공무원 등 2명 징역형

'광주 5대구청 공무직으로 취업 시켜줄 수 있다'며 취업청탁을 알선한 5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채)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미화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광주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인 C씨와 공모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받고 취업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남구 소속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공무직 자리가 나오면 인사비정도 받고 취업시켜주겠다"는 광주시 서구 공무직 C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친구 B씨도 끌어들었다.

이들은 취업을 알선한 이가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받은 후 취업이 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이 받은 돈은 최종적으로 C씨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직 취업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큰 점, 대부분 수수금액을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